<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Argentina를 향한 힘찬 발걸음!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996년 「Auld Lang Syne」이 울릴 무렵 부지런하기 짝이 없는 정부 · 여당은 게으른 국민들을 탓하기라도 하는 듯 온국민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녘을 가르며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국가경제를 제물로 정치판을 벌이겠다는-오직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명분도 절차도 다 내팽게친 채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1997년 동녘이 밝기전에 해치운-아이러니가 현실에서 벌어지고만 것이다.
그 날치기가 진정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구구하게 잔소리를 늘어놓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1996년말 대미를 장식한 「노동법」 날치기는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으니 오늘의 경제난국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주범으로 자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정치판을 휘어잡기 위해, 그렇잖아도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민경제를 볼모로, 그것도 야당이 「노동법」 처리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1997년 2월까지 시간을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 마당이고, 노동계도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추고 있는 시점에서 날치기를 자행한 것이다.
물론 국민회의 및 자민련, 노동계가 정부나 재벌들이 의도하는데로 순순히 응해줄리 만무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에 상대가 있듯이, 노사관계에서도 경제상황을 이해시키고 법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상대가 이해하고 그렇지 않고는 다음의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동의는 물론이요, 야당과의 협상 자체를 거부하면서 날치기 처리한 것은 「노동법」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가 원래의 의도였음을 충분히 감지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 「정치본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이 바로 「노동법」 처리라는 것이고, 여기에 노동계가 춤을 추고-춤을 춘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놀아주었다고 한다면 너무 잔인한 평가일까?
현재의 국민정서나 노동자들의 자세로 볼 때 현실인식을 정확히 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인가 노력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또 그 흔적을 찾기도 어렵다는 것은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에 앞서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재벌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나 부채에 의존하는 경영방식을 개선하고 부를 균형있게 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경쟁력 저하요인 5가지-고임금, 고지가, 고금리, 고물류비, 저효율성- 중 최소한 3가지 아니 모두가 그들 재벌의 탓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고지가나 고물류비는 재벌을 비롯한 「5적」들의 장난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고금리도 재벌들의 부채에 의한 문어발식 확장 때문에 금융자금을 독식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고, 고임금 및 저효율성 역시 경제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호황을 누릴 것으로 착각한 재벌들의 경쟁적 임금올리기 경쟁에 여유된 바 크다.
그런데도 오늘, 고임금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고 국제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금인상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인력을 잘라내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외쳐대는 심사는 무엇인가.
어느 누가 그들에게 대처능력을 잃고, 경쟁력을 좀먹을 정도로 고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는가 말이다. 그들 스스로가 5년,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저지른 과오를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를 볼모로 정치를 행하고」 「재벌들의 후안무치를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억지를 수용한」 결과 오늘의 무정부주의적 행태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다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비극적인 경제판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를 볼모로 「정치」를 하는 몰상식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화학저널 1997/1/27>